

오피니언

11

사설

이공계 인재 유출, 최소화할 방안 찾자

이공계열 학생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유출이 일부 역할을 했고,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 이에 따른 이공계 경쟁력 약화 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공계 공백이 곧 연구력 약화 및 경쟁력 저하로 우리학 교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공계 인재 이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우리학교 또한 구조적 위기로 위 사안을 인식하고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학교를 떠난 학생 중 46%가 이공계였고, 지난해에만 412명이 자퇴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작년 대비 52명 증가해, 14.2%p 상승한 숫자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 연계 확대, 그리고 연구를 위한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공계 이탈은 단지 학과 이동이 아닌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된다. 석박사 진학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연구실 인력 공백이 생기고, 기업의 고급 연구 인력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늘었지만, 신규 박사 중 약 30%가 취업에 실패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최고치다. 경쟁력이 있는 연구자가 설 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이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됐고, 이후 우리학교 공대 자퇴율은 14%p나 증가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계열 쏠림’을 심화시키며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을 촉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기업 협약 기반의 계약학과를 잇달아 개설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인 듯하

“

‘이공계 인재 이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우리학교 또한 구조적 위기로

위사안을 인식하고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

다. 우리학교는 올해 RISE 사업을 통해 계약학과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실질적 산학 연계 구조나 기업 협력 모델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위한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장

비 노후화, 실습 공간 부족 등은 여전히 연구생들과 교수의 고민으로 남아 있다. 연구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그에 따른 성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무 중심의 교육 강화도 필수적이다. 공학 분야의 최신 산업 수요에 맞춰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인턴십과 산학 프로젝트를 제도화해야 한다. 교수와 기업이 함께 지도하는 협력형 수업,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 개발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금과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진학과 잔류 동기를 높여야 한다.

이공계 학생은 우리학교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는 대학 전체 연구력 약화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학생들이 “우리학교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대학은 구체적인 실천과 지원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세시봉

표현의 경계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 매체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징벌배상이 핵심이다. 이미 일부 정치 유튜버의 음모론과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왔다. 개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규제의 방식과 기준이 모호하며, 그로 인한 자의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문제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허위’이며, 어느 수준의 ‘조작’을 불법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모호한 개념은 판단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크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고려할 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일반 시민의 목소리나 언론의 비판적 보도까지 위축될 우려도 있다. 특히 개정안은 손해 배상 기준 중 ‘타인을 해할 의도’를 고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는 입증하기 어렵고, 결국 해석 권한을 가진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 주체들이 청구권자로 포함돼 있는 점도 문제다. 권력자에게 불편한 언론 보도가 허위조작정보로 규정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약자와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계로 번질 우려가 있다. 물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 문제다. 그러나 그 해법이 규제 일변도로 흐른다면,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뢰 관계 회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선한 의도조차 모호한 규제 아래에서는 언제나 검열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 법은 진실을 억누르는 수단이 아닌, 더 많은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개인을 바라보는 방법

프레임 벗기기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젠지스테어’라는 말이 화제다. 대화 중 멍하니 쳐다보는 요즘 젊은 층의 소통 방식을 꼬집는 표현이다.

반대로 길에서 최신 아이폰을 들고 스투시 패션을 입은 중년을 보면 “나잇값 못하고 유난 댈다”며 비판하는 ‘영포티’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세대를 규정하는 단어들이 빠르게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캠퍼스에서 만난 Z세대는 다르다. 우리학교 교수들과 학교 앞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딱히 젠지스테어를 느껴본 적 없다”, “사람 성격 차이일 뿐이다”, “요즘 학생들,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다”는 답이 돌아왔다. 매체에서 강조하는 ‘무례한 Z세대’의 모습은 오히려 낯설었다.

물론 이전 세대보다 말이 짧게

나 답변까지 잠시의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무례함’이나 ‘소통 단절’로 해석하기보다는 개인의 표현 방식 차이로 보는 편이 옳다. 교수나 상인 모두 실제로 ‘젠지스테어’를 경험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단 3~5초의 침묵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상대를 ‘젠지스테어’라 단정하기보다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젠지스테어’, ‘영포티’처럼 세대를 규정하는 단어는 결국 한 사람을 특정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프레임이 된다. 하지만 사람은 단 어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누군가는 단순히 생각이 느린 사람일 뿐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웃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Z세대도 40대도 어느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없다.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붙여지는 꼬리표는 개인의 맥락과 성향, 경험을 지워버린다. 세대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벗고, 각자의 속도를 가진 ‘개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만평 세대를 규정하는 단어로 개인을 바라본다.

교수 문화세계의 창조
교원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장 하시언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